

## 범죄와의 戰爭에 대한 政策 및 實踐的 背景

金 學 俊  
(대통령 정책조사 特補)

### I

필자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사회담당보좌역」으로 있었던 때분인지 필자에게 들어오는 국민들의 편지들 가운데 압도적인 부분이 사회문제에 관련된 것이었다. 한 달 평균 1백통 정도로 들어오는 편지들 가운데 90통 정도가 교육, 환경, 교통, 노동, 법질서 등등을 다룬 것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主宗은 범죄와 폭력에 관련된 것이다. 흉악범들과 폭력배들에 시달려 못살겠으니 제발 편히 잠잘 수 있도록 강력한 조처들을 취해 달라는 호소가 바로 그것이다.

계엄령을 펴거나 위수령을 펴서라도 법질서를 세우라는 건의도 있으며, 「삼청교육」을 부활하라는 주장도 있고, 가정파괴범과 같은 극악범은 3심 절차도 거치지 말고 단심으로 처리해서 공개처형하라는 읍소도 있다.

그뿐 아니다. 범죄와 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대통령이 이제부터 「독재정치」를 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요구도 들어 있다. 「민선대통령이고 단임대통령인 분이 무엇이 두려워 독저를 못 하느냐, 독재를 하지 않고는 법과 질서를 바로 잡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의견개진도 쏟아져 나왔다.

정부의 최소한의 책무가 국방과 치안임을 생각할 때, 치안의 허점을 나무라는 국민들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 그래서 「염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정부로서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꼭 보내곤 한다.

곰곰이 따져 보면 우리나라가 범죄발생률에서 유별나게 앞서 있지는 않다. 국제경찰기구가 발표한 객관적인 자료에 따르면 88년 현재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는 조사대상국 23개국 가운데 스웨덴이 1위이고 미국은 7위이며 우리나라는 13위이다. 이웃 일본은 14위이다. 살인만 따질 때 우리나라는 20위이고 강도만 따질 때 역시 20위이며, 성폭행의 경우에는 10위이다.

한편 범죄검거율을 같은 자료에 입각해 살펴건대 우리나라는 단연 1위이다. 살인의 경우에도 1위이며, 강도의 경우에는 2위이고 성폭행의 경우에는 3위이고, 폭력의 경우에는 2위이다. 범죄검거율은 방범기동순찰차를 운영하기 시작한 지난 4월 이후 훨씬 높아졌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치안상황에 불안해 하고 있으며, 비상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범죄와 폭력을 「스탕」해 달라고 절규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盧泰愚 大統領은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10.13 특별담화를 통해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으며, 그렇기에 그 선언은 한국갤럽 여론조사연구소가 밝혔듯이 약 77%의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10.13 선언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이 사실이다. 사회가 부패했기에 범죄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회병폐의 근원적 치유에 힘써야지 그 「피해자」인 범죄자들만 비난해서야 되느냐는 지적도 있고 인권 제약의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있다. 모두 경청하고 존중해야 할 가르침이다. 당국은 인권제약의 소지가 없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사회 전체를 보다 더 건강하게 가꿔 범죄가 줄어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범죄의 원인을 사회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행여 범죄자의 행위를 은연중에 감싸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 똑같이 어려운 여건 아래 성장하면서도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 많았기에 우리 사회가 이만큼 발전해 왔음을 생각할 때, 개개인의 마음가짐과 생활자세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에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神이 아니고 그 자신의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여기서 우리는 잠시 저 유명한 여류 정치사상가 한나 아렌트를

떠올리게 된다. 독일이 패망한 뒤 나치의 범죄를 따지는 역사의 법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책임을 독일 사회에 돌렸으며, 따라서 나치당원들은 사회의 아들로써 시대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개별적 인간의 무책임론」이 자라나게 되었을 때, 아렌트교수는 나치 가담자들이 그러한 잘못된 길을 걷게 된 개개인의 성격적 행태적 잠재성을 준절하게 꾸짖었던 것이다.

인권제약의 가능성을 걱정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결론부터 말해,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이 범죄자들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단계가 아닐까 한다. 또 말없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의 명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을 잠시 되씹어 보게 된다. 평소에 백인우월주의와 흑인차별주의를 비판하던 진보적 언론인이 막상 사랑하는 딸이 결혼 상대자로 흑인을 초청해왔을 때 느끼는 심리적 갈등과 당혹과 거부됨을 잘 묘사한 영화였다. 흑시 흉악범의 극악한 범죄를 직접 겪어보지 않았기에 고상한 원론을 강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만든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비유일까.

최근 「대통령 정책조사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사회문제에 관한 편지들은 계속해서 들어 온다. 그것들의 대종은 역시 10.13 선언에 대한 뜨거운 지지이다. 일부의 비판이 두려워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수행이 중간에서 호지부지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국민들의 소리가 곧 民草의 소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들을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힘을 계속해서 쏟을 것이다. 정부의 조처들을 뒷받침해주는 국민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운동이 보다 더 활발히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최근 국민들 사이에는 『국가가 강해져야 하겠다』, 『정부가 세져야 하겠다』는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 이른바 強性國家論 또는 強力政府論이 확산되고 있다.

돌이켜 생각건대, 어느 사회에서나 혼란의 시기가 길어질 때 반드시 나타났던 정치이론이 강령국가론이었다. 유럽의 근대정치사를 살필 때 그 선구적 사상가가 프랑스의 장 토당이였다. 중세가 무너지고 근대로 넘어오던 전환기에 종교전쟁이다 뭐다 해서 내란과 무질서가 판을 칠을 성찰하던 그는 강력한 군주의 절대적 통치권 아래 정치질서와 국가통합을 확립하자고 제의함으로써 절대주의체제의 출현을 뒷받침했던 것이다.

그의 뒤를 이어 보다 더 체계적이며 독창적인 강령국가론을 전개한 정치사상가가 이탈리아의 니콜로 마키아벨리였다. 지리결렬한 가운데 대결과 무질서에 시달리는 동포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통일국가를 세워야 하겠는데, 이미 지나치게 부패하고 타락한 국민들로서는 그 어려운 과제를 성취할 수 없는 만큼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奸智를 겸비한 강력한 군주가 나타나야 한다고 제의했던 것이다. 이로써 그 역시 절대군주체제의 출현을 뒷받침한 정치이론가로 꼽히고 있다.

절대주의체제의 출현과 더불어 서양에서는 근대국가의 시대에 들어서거니와 이에 비해 우리 역사의 경우에는 제한 군주론이 보편적이었다고 하겠다. 예컨대 고려는 대체로 귀족의 힘이 군주의 힘을 넘어서는 귀족지배사회였으며 조선은 太宗과 世祖를 포함하는 소수의 군주를 빼놓고는 臣權에 제약된 王權밖에는 행사할 수 없었던 약한 군주에 의해 통치되는 양반지배사회였다.

이처럼 왕권과 신권 사이에 일종의 견제관계가 성립되어 있었으며 지배권력 안에서의 이러한 견제관계가 조선사회의 균형과 안정을 유지시킬 수 있었고, 그래서 조선왕조는 세제 왕조사상 드물게 5백여년 동안 존속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는 이들도 있거니와 이 설명에서도 보듯이 우리의 근대사에서는 절대군주를 찾기 어렵다. 더구나 常備軍과 관료제를 두고 서서 국가주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절대군주가 사회 전반을 장악한 가운데 국정을 강력하게 이끌어 나가는 근대국가의 모습이란 찾아보기 어렵다.

外侵과 民亂이 잦았던 조선왕조 시대에 절대군주의 출현을 대방하는 정치사상이 출현했을 법한데 그러한 보기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신기하기조차 하다. 오히려 제한군주론의 전통이 강했다고 할까. 李成桂를 도와 조선의 창업을 뒷받침했던 鄭道傳이 理想視했던 체제 곧 국왕은 군림하기만 하고 정승판서가 衆智로써 통치하는 臣權중심적 체제에 대한 존중이 지배적이었다.

통치자의 권력은 제한되어야 하고 견제되어야 한다는 믿음은, 자유민주주의가 국가이념으로 받아들여진 대한민국 제1공화정의 수립 이후 이 나라의 사상적 주류를 형성해 왔다. 여기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고 朴正熙대통령의 유신체제였고 그 유산이 제5공화정이었다고 하겠다.

두 체제는 모두 強性國家體制였다. 오늘날 「왜 정부가 강력하지 못하고 약하냐」고 비난하는 일부 국민들의 뇌리에 은연중에 대조되는 강력한 정부란 바로 유신체제와 5共和 같은 정부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을 그러한 強性國家 아래서 사회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은 오히려 제한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더 정확히 말해 사회세력의 도전과 반발 및 저항 앞에서 막강할 것만 같던 국가권력은 현실적으로 무력했던 것이다. 그 많았던 긴급조치들이 그리고 사실상의 준계엄체제가 百藥이 무효처럼 힘을 쓰지 못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절대주의체제의 전성을 상징했던 루이 14세의 프랑스에서 이미 발견되었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이미 날카롭게 파헤쳤듯이 「짐이 곧 국가이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루이 14세의 통치 시기에 사회에 대한 국가권력의 침투력은 상당히 제한되기 시작했으며 이 현상은 루이 16세의 치세에 보편화되었던 것이다.

확실히 우리 사회는 「파편화된 사회」의 징후들을 나타내고 있다. 공동체적 성격은 점점 약해지는 반면에 사회 각 부문 극심한 이기주의에 빠져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마키아벨리가 이탈리아를 바라보며 개탄하는 가운데 썼던 개념인 「부패사회」의 모습이 우리의 경우에도 재현되는 것 같다.

이 걱정스런 상황을 강력국가론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심지어 때때로 출몰하는 독재회귀론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정부의 통치력과 지도력은 보다 더 확고히 세워지고 보다 더 강력히 행사되어야 한다. 민주화를 것처럼 열망하던 국민들이 『민주주의도 좋지만 무엇보다 사회질서와 법질서가 바로 잡혀야겠다』고 외칠 때는 얼마나 답답했기에 그러했을 것인가. 정부와 정치인들은 꼼꼼이 돌이켜 생각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아래서도 초헌법적인 발상과 논리는 금물이다. 민주헌정의 틀 안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서는 안된다. 어렵게 만들어진 제 6공화정의 민주헌법을 지키는 가운데 『강력한 정부』의 길을 찾아야 한다.

거기에는 1차적으로 집권세력의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민주개혁이 있어야 하고 과감한 결단이 따라야 하며 여야 모두를 포함한 정치인들의 역사 앞에 책임을 지는 용기 있는 판단과 행동이 뒷받침 해야 하고, 언론과 기업을 비롯한 사회 지도세력의 애국적인 처신이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도 특히 영향력 있는 국민들은 자제와 인내의 미덕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호소한다.